

교육

# 소득 분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학제도 … 사각지대 없나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현실과 다른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없다.”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학생들에게 차례로 공개됐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에선 지원구간 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했다. 가계가 곤란해 학업 수행이 어려움에도 장학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거나, 소득분위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장학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대학가에서 장학금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활용해 각 학생의 가계곤란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장학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대학의 장학 게시판에 올라온 대외 장학금도 대부분 1차적인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3-8분위’를 제시하고 있다. 우정장학 등의 교내장학금 역시 한국장학재단의 산정 결과를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모의 계산을 이용한 한 가계 상황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서울 시내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 가구 중, 부모님과 형제가 모두 임시직으로 근무해 각각 200만원의 수입을 얻고, 가정에 생계를 위한 자동차 재산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9분위에 해당한다(부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여기에 실직,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이 생겨 학비 보조가 필요해지면, 해당 학생은 사실상 외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학 지원이 전무한 셈이다.

학생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혜택 범위에서 배제되는 순간 다른 장학제도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퇴직 등의 긴급한 가계 사정, 혹은 대학생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을 반영할 수 없는 소득 분위로 대부분의 장학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장학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 공식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산정 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인적 공제를 통해 가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재산에 대해서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분위 산정에 반영을 하고 있었다. 가계의 현금 흐름은 학생의 학업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월 소득을 중심으로 가계 곤란도를 파악하는 공식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소득분위 산정이 현실과 다르다고 체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이 국

승인된 국가장학재단 소득분위 재산정 요청 건수 3년간 5만7천여 건  
국가장학금 지원 공백 적극적으로 찾아 보완한 장학제도 필요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공식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 / 3 자동차 : 월 4.17% / 3 금융재산 : 월 6.26%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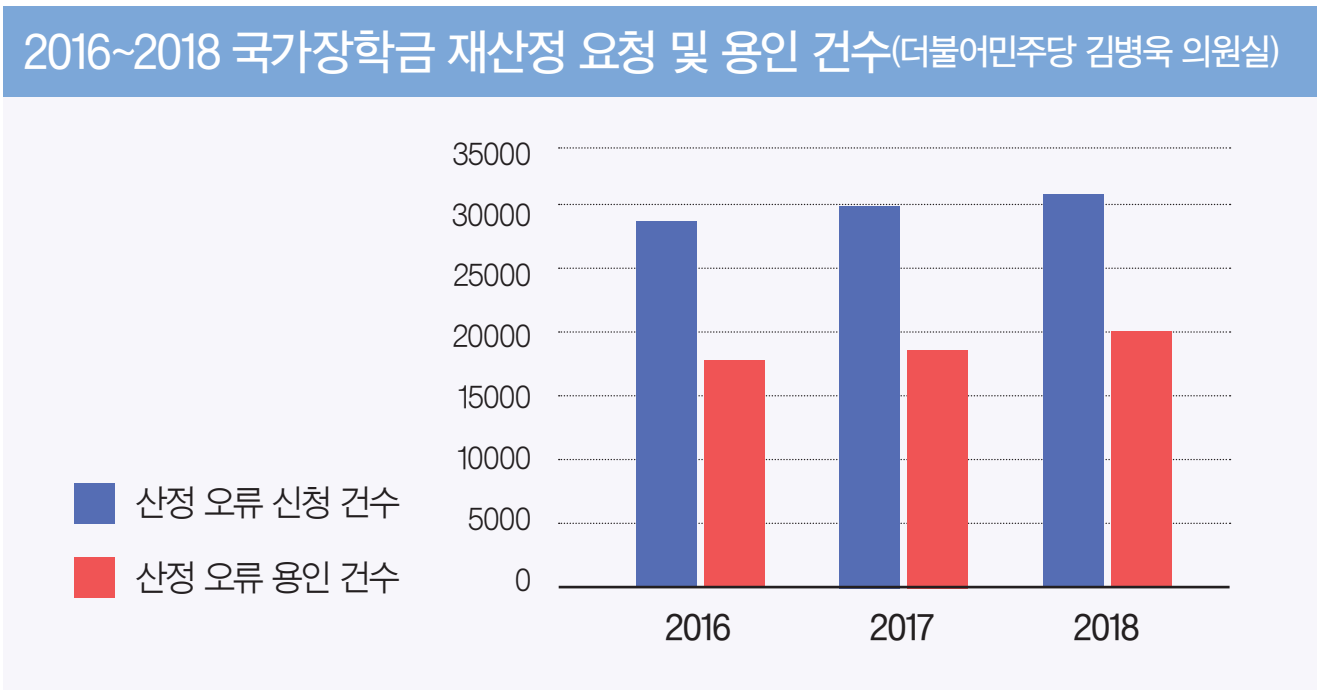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1) 소득공제

가) 학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액에서 130만원 공제.  
나) 가구원 :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 공제

#### 2) 재산공제

가) 기본재산액 : 5,400만원 공제 적용



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정을 요청한 건수는 매년 3만 건 정도다. 3년간 재산정 요청이 용인돼 지원구간이 바뀐 건수도 5만 7천여 건에 달한다. 학생이 요청해야만 재산정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오류건수는 알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 산정이 실제 상황과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자료를 최신화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모님의 퇴직이나, 부채 증가 등 지원구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발생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학생이 재산정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지원구간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산정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과의 시간적 차이가 상당한데다, 학생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오류가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일부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이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사업 자금 대출, 한도 대출 상품의 경우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가

계 내의 긴급한 상황 또한 지원구간 산정 공식에 반영될 여지가 적다. 질병, 실직, 일부 과도한 부채 등 사회적 위험이 일률적인 기준에는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서봉균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는 “보편적인 장학금 혜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제한된 재원 내에서는 소득 중심의 현 산정 기준은 타당하다”면서도 “소득 파악 자체에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과소평가되거나, 다자녀 가구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생업을 위한 자동차 등의 재산 보유도 산정 공식에는 재산으로 반영돼 불합리할 수 있다”며 일부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지원구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 임연희 과장 역시 “가계곤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구간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서도, “해당 지표가 완벽한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 제도를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 혹은 일부 자료

의 미반영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보완할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보완할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역시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장학제도에는 성적에 따른 장학제도와, 긴급 구호 목적의 장학제도 등이 있다.

다만 성적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학업을 장려한다는 장학금의 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이 대학 전반의 흐름이다. 마찬가지로 취지로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넓히며, 성적 우수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는 식의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봉균 교수는 “장학제도는 본질적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취지를 갖고 있고, 학업을 잘 수행한 학생은 이미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원 없이는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장학의 목적에 맞다”고 현 장학제도의 흐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가계가 곤란하지만 지난 소득 자료와 현재의 산정 기준 내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남은 대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장학제도다. 먼저 장학금을 신청한 뒤 추후 관련 사실을 학생이 증명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사정을 장학재단에 설명하여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 대학의 일부 장학제도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임연희 과장은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지원구간에 속해있지만 부모님 및 본인 질병, 소득 급감 또는 퇴직, 사망 등의 사유 발생했을 경우 ‘경희목련장학’을 신청하면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장학사정관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긴급 구호 성격의 장학제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형태의 장학제도다. 3월부터 학내 장학게시판에 게재된 관련 공지 중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1차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출신 지역이나 전공 등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은 교내에서 실시 중인 ‘점프 장학(성적 향상 기준)’, ‘경희꿈도전장학(학생 역량 강화 성격)’, ‘경희목련장학(가계곤란, 긴급 구호 성격)’ 외엔 없다.

장학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임연희 과장은 “소득분위, 기타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며, 장학참여단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겠다”며 장학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